

## 5차시 [학교폭력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와 학교안전공제회]

### <학습목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학생측에서 가해학생측 및 교사, 학교장,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요건과 각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학생측이 가해학생측 및 교사, 학교장,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교폭력 사건 등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원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피해학생측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 1. 민법상의 불법행위 요건

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보호자나 교사나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2)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을 것, (3)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4) 가행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의 요건이 성립해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1)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불법행위에서 요구되는 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상적경과실이다. 추상적경과실은 주의의 기준을 사회 보통의 일반인에게 맞추는 것이며, 구체적경과실은 행위자 개인의 주의 능력에 맞추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추상적 경과실과 추상적 중과실이 있는데 보통 과실이라 할때의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하며, 추상적 경과실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사회 일반인의 주의 정도이다.

(2) 판례에서 나타난 과실인정 기준을 보면 위험한 과목 등에 있어서 사전

연습지도, 주의 지시이행 여부, 체험활동으로 나간 수련원이나 수영장 등에서 감시원의 배치와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여부, 학교 건물 내·외의 시설물 점검이 충분했느냐 여부 등이 있다.

다. (1) 민법은 책임능력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책임무능력자규정(미성년자로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 심신상실자)만을 두고 있으며, 책임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능력을 불법행위 능력이라고도 한다.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즉 그 결과가 위법한 것이어서 법률상 비난 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판례는 책임무능력자의 연령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만12세 미만인 경우는 민법 제7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한 지능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반면에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겐 대체로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교사가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했으나,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교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이다. 책임능력에 있어서 가해자가 교원인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학생간의 사고에 있어서 교사는 가해학생의 법정 대리인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갖는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755조 및 제913조)를 대신하여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라. (1) 권리의 침해가 위법한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고 그 것이 법위반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대체로 위법한 것으로 판정 받게 될 것이다.

(2)위법성의 문제는 교사에 의한 징계, 체벌, 폭행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학생간의 사고에 있어서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문제가 된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행위가 교장의 지시나 허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마. (1)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

며 그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배상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가해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것과 성립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요구되는 인과관계가 있다.

(2) 손해는 유형, 무형의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2. 가해학생 및 학부모(가해학생 감독의무자)의 책임

### 가. 가해학생의 책임

불법행위자인 가해학생 본인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할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3조). 여기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 함은 책임능력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써, 통상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는 도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나아가 그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써 법률상 비난을 받고 어떤 법률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책임무능력자의 연령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만12세 미만인 경우는 민법 제7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한 지능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반면에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겐 대체로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나. 학부모의 책임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실제로 그 친권자가 일반적 지도·교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친권자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민법은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이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는 하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민

법 제755조).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부모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판례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부모들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로서 부모의 의무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605 전원합의체 판결)

#### 다. 학교(설치경영자)의 책임

학교 관계자(교장이나 교사)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 즉 대리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라. 교사의 개인 책임

교사의 개인 책임은 사립학교의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사립학교의 교사는 학교폭력 사고의 발생에 있어 그에게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고에 대하여 학교설치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국·공립학교의 교사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그 교사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사실상 대폭 제한된다.

#### 마. 교사의 학교 설치자로부터의 구상책임

학교의 설치·경영자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교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결과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경과실의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불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점이 국가배상법상 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국·공립학교 교사와 차이가 있다.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사실상 대폭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 바. 교장 등 관리책임자의 개인 책임

사립학교의 총장, 학장, 교장, 단장, 이사 등 학교관리책임자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의 책임(소위 사

업대리감독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무’의 집행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국·공립학교의 관리직 종사자에 관해서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 부모의 책임과 교사 등 학교측의 책임과의 관계

가해학생의 부모의 법정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과 담임교사 등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학교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자의 책임은 병존할 수 있다고 보아 부모와 학교측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경우 어느 일방이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비율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교사 등 학교설치자와 부모 등 친권자측의 사고발생에 대한 각자의 관여비율, 즉 교사와 친권자의 각자 보호·감독의무의 해태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3. 학교폭력 사건 등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원의 주의의무

가. 학교폭력 사건 등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원의 주의의무에는 크게 교원의 직접적 교육활동과 관련한 주의의무와 학생 친권자의 대리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

나. 교원의 교수행위는 교사의 직무에 속한다. 교사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학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교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를, 사립학교 교원은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적용한다.

다. 민법 제755조 의하면 교사는 학생의 친권자에 갈음하여 그를 감독할 법정의를무를 지닌 자로서 책임을 지며 그들의 친권자(부모) 또한 연대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학생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이다. 비록 교원의 책임이 대리감독자의 위치이므로 친권자인 부모가 지는 책임보다 그 범위가 좁다고는 하나 학교안전사고는 그 특성상 항상 잠재해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실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 사례로는 실험실습시간에 있어서 주의사항의 전달여부, 체육시간에 있어서 사전준비운동의 실시유무— 학생의 체벌에 있어서 교사의 주의유무, 학생간의 왕따 내지 폭력의 근절지도와 배려여부, 현장체험학습에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에 따라 교원의 책임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라. 판례의 태도는 “교원의 학생 보호 감독·의무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만 한하여,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 4.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가. 학교폭력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초등학교 6학년생인 A는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가해학생들은 위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로서 그들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A 및 A의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괴롭힘은 통상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고, 그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이 사회문제화 되어 학교에서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가해학생들 역시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아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A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공립중학교내에서 다수의 중학생들이 같은 반 급우를 집단폭행 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학부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U시가 설치·운영하는 T중학교 학생인 A는 중학교내 교실 안에서 자율학습 시간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B로부터 등을 2회 주먹으로 맞았고, 옆에 있던 C는 주먹으로 A의 얼굴과 팔을 때렸으며, D는 옆에서 A의 먹살을 잡았다.

며칠 후 학교수업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장난삼아 주먹으로 A의 등을 수 회 때렸고, 이를 보고 있던 위 B, C를 포함한 총 8인의 같은 반 학생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A의 머리와 등과 팔등의 신체부위를 수 회씩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A는 평소에도 수업시간에 이따금 엎드려 잠을 자고, 친구들과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며, 친구들이 장난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A는 가해학생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면부 좌상, 구내 열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사고 상환에 대한 반복적 회상, 대인관계 기피,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병원에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담임교사인 R은 이 사건 집단폭행이 있기 전에 가해학생들 중 한 명이 A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가해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고, 며칠 후에는 가해학생들이 같은 반의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인들을 불러 질타하기도 하였다.

##### **5.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생의 보호 감독에 대한 교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건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 H 학원이 설립한 L사립 고등학교 2학년(당시 17세 2개월)에 재학 중인 A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같은 반 급우인 J가 장난을 할 의도로 위 A모르게 그가 앉아 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우측발로 의자다리의 뒷부분을 갑자기 건어 차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세멘콘크리트로 된 교실벽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뇌좌상, 기억력상실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을 맡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학원으로서 그 교육의 한 부분인 학생들의 집단생활을 일반적으로 보호 감독하여야 하고, 학생들간의 심한 장난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는 특히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담임교사나 기타 당직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위험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 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수업을 하기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인 J는 사고 당시 18세 6개월 가량된 고등학교 2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인 A와도 친한 사이였다.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도 없다.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 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K도가 설치·운영하는 S 중학교 1학년 1반생인 C는 교실에서 3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도시락을 먹고 있던 중 A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B와 장난을 치다가 그 밀대에 묻어 있던 더러운 물방울이 도시락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A의 왼쪽 눈 부위를 세게 쳐서 그에게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상을 입혔다.

C는 위 1학년 1반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반면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C는 봄경에는 D가 미술교사의 치마 속을 드러다 본 일이 있어서 미술교사의 지시에 따라 D를 그녀에게 데려 가려고 하였으나 D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턱을 쳐서 뒷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안경을 떨어뜨려 렌즈가 빠지게 하였고, 9월 경에는 축구를 하던 중 E와 부딪치자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쓰러져 있던 E의 얼굴을 발로 차서 볼이 통통 부어오르게 한 적도 있는 학생이다.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3교시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

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학급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반 친구로서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시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I시가 설치 운영하는 S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A는 10:00경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와 쉬는 시간에 같은 반 학생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폭행을 당한 이유는 A 등이 학교 담을 넘어 나갔다 오다가 들키는 바람에 체육교사로부터 같은 반 학생들이 단체로 벌을 받아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체육시간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자 C는 만 14세 4개월 정도로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고, 비록 공부를 못하고 성격이 급하나 본성이 착하여 평소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힌 일이 없으며, A와 같은 급우로서 별 문제 없이 지내왔고, A도 비록 공부는 못하나 심성이 고운 학생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학생이었으며, 체육교사가 단체기합을 주게 된 동기와 약 5분 정도에 걸쳐 쪼그려뛰기 20회, 엎드렸다 일어나기 20회, 팔벌려뛰기 20회를 실시한 체벌의 방법과 정도로 보아 교육적 차원에서 정당하고, 그 단체기합으로 인하여 같은 반 학생들이 A등에게 반감을 가질 정도의 것은 아

나라고 보인다.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체육교사나 담임교사 등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에 앞서 체육요사가 단체기합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체육교사 등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6.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이다.

#### **7.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고**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법제43조1항 1호) 및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자살·자해 등의 사고피공제자, 공제가입자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고(법제43조1항 3호)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사고이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법제43조 1항 2호)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 **8.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 사고**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공제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정규교육활동의 종료시간 및 사고발생 시간, 체류시간 중의 활동 상황, 교사의 체류지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의 경우에만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이다.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의 파괴와 그로 인해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그 이외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접적인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

#### 9. 현장학습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구타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한 경우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서 학교장의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활동 중 학생, 교직원 등이 입은 생명 또는 신체적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있어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이 되나, 금품 갈취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학생이 교사 또는 동료와 함께 활동하지 아니하고 구타를 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제반 경위 및 사고의 신고 등을 게을리 하여 가해자를 찾지 못하게 된 책임 등을 엄격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 10. 학교폭력의 경우 공제급여 청구 및 구상권 행사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서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란 가해를 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로 단순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관계기관(학교, 경찰서 등)에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를 실시하였으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결과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해자가 분명하지만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무자력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등 관계기관의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회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제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부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게 된다.

#### 11. 학교폭력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

학교폭력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요양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혜택을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중 학교안전공제회가 인정하는 금액이다. 폭행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치료비 전액이 청구되지만,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는 그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게 된다.

#### 정리하기

판례는 책임무능력자의 연령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만12세 미만인 경우는 민법 제7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한 지능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반면에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겐 대체로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서 “ 피해학생이 전문

단체나 전문가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란 가해를 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로 단순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관계기관(학교, 경찰서 등)에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를 실시하였으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결과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해자가 분명하지만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무자력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등 관계기관의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회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제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평가하기

문제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할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란 통상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는 도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나아가 그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써 법률상 비난을 받고 어떤 법률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3) 판례는 책임무능력자의 연령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만12세 미만인 경우는 민법 제7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한 지능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반면에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겐 대체로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4) 판례는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실제로 그 친권

자가 일반적 지도·교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친권자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5) 판례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부모들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로서 부모의 의무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 정답 : (2)

불법행위자인 가해학생 본인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할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3조). 여기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 함은 책임능력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써, 통상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는 도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나아가 그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써 법률상 비난을 받고 어떤 법률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문제 2.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학교 관계자(교장이나 교사)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

(2)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3)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4) 사립학교의 교사는 학교폭력 사고의 발생에 있어 그에게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5) 국·공립학교 교사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고에 대하여 학교설치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의 교사 개인은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정답 : (5)

국·공립학교 교사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고에 대하여 학교설치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국·공립학교의 교사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그 교사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

#### 문제 3. 학교폭력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현장학습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구타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한 경우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갈취당한 금품도 보상대상이 된다.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학교폭력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요양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혜택을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중 학교안전공제회가 인정하는 금액이다.

(5)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구타하여 피해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치료비 전액이 청구되지  
만,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는 그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이 적  
용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게 된다.

**정답 : (1)**

현장학습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구타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한 경우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이 되나, 금품 갈취에 대해서는 갈취당한 금품은  
보상대상이 아니다.